

News

하나은행도 3일부터 예·적금 금리 0.1~0.3%p 인상

조선비즈

하나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반영해 예·적금 금리 3일부터 연 0.1~0.3%p 인상… 정기예금 최고 연 0.2%p, 적금 최고 연 0.3%p 인상

그간 케이뱅크,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이 예·적금 금리 인상…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수신상품 금리 인상 예정

우리은행, 이달부터 전세대출 재개… "이전 지점별로 관리"

머니S

우리은행, 올 3분기 한도소진을 이유로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지난 1일부터 재개… 지점별 월별 한도 부여해 전세대출 총량 관리한다는 계획

그동안은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를 은행 전체, 분기별로 관리… 대출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

이주열·고승범, 오늘 회동… 영끌·빛투 차단 논의하나

머니S

한은 이주열 총재, 3일 오전 고승범 위원장과 단독으로 회동… 한은 수장이 금융위원장과 별도 단독 회동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평가

이번 회동에서 1,800조원 웃도는 가계부채 논의할 것으로 예상…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신용의 과도한 증가세 완화에 도움" 언급한 바 있어...

'출범 임박' 3호 인뱅 토스뱅크, 대출 총량 규제 일단 유예

뉴스1

금융당국, 총량 규제 기준이 되는 전년도 대출 실적조차 없는 걸음마 단계 은행에 대해 대출 규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9월말 ~10월초 출범 예정 토스뱅크 규제 유예

현 은행권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말대비 5~6% 수준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총량 관리 중… 토스뱅크 대출 증가 속도가 높으면 언제든 규제 가능

보험사들, 80세 이상 변액보험 가입 권유 제한 없앴다

아시아경제

생명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고령 금융소비자도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완화… 고령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선택권 줘야 한다는 취지

고령금융소비자가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상품 가입 시 청약철회기간 최대 45일로 확대… 80세 이상 소비자 변액보험 가입 권유 내용도 삭제

DB손보, 보험사 최초 '신용대출 중단'…업계 확산 여부 '주목'

데일리안

DB손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사 신용대출 신규 영업 중단… 금감원, 지난달 20일 보험업계에 개인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요청

DB손보를 시작으로 보험업계 대출 중단 및 축소 확대될 가능성 우려… 보험사 취급 대출 상품 금리도 오를 가능성도 현실화

상하이·선전 이어 세번째…중국, 베이징증권거래소 만든다

서울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일 열린 '2021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개막 연설에서 '베이징증권거래소를 설립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장 만들 것' 언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은 금융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심화 및 자본시장 완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설명

한국금융지주, 회사채 수요예측서 5배 가까이 자금 받아

헤럴드경제

한국금융지주, 3년물로 1,100억원 모집에 4,700억원, 5년물로 400억원 모집에 2,500억원 자금을 받아 총 1,500억원 모집에 7,200억원 자금 받아…

-20bp에서 20bp의 금리 밴드 제시해 2년물은 -2bp, 5년물은 -6bp에 모집물량 채워… 9일 회사채 발행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